

청지기 윤리의 위기와 경제위기

The Corruption of Stewardship as A Cause of Economic Crisis

한동근

- I. 경제위기와 청지기 윤리
- II. 경제위기의 원인
 - 1. 과잉투자 / 과대부채와 도덕적 해이
 - 2. 부동산 투기와 비효율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
 - 3. 지대추구 행위와 부정부패
- III. 경제위기 원인들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
- IV. 과제 - 청지기 윤리의 회복
 - 1. 정책적 과제
 - 2. 개인적인 삶

Abstract

This paper claims that the corruption of the stewardship is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Korean economic crisis. The paper points out that prevalent moral hazard, land speculation, and rent-seeking behavior resulted in over-investment, high costs of production, and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in Korea. And it is shown that moral hazard, land speculation, and rent-seeking behavior stemmed from the fall of stewardship. This paper, therefore, emphasizes spiritual revival to restore the sound stewardship as the most important step toward economic revival

I. 경제위기와 청지기 윤리

경이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던 한국경제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국민들이 실직의 고통과 공포에 떨어야 하는 이 경제위기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본고는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청지기 윤리의 위기에서 찾고자 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물질을 청지기 직분에 충실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으로 지목하고자 한다.

청지기 윤리의 위기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되는데, 여기서는 특히 도덕적 해이, 토지투기, 그리고 지대추구 행위에 주목하고자 한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는 많은 논문들은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과잉투자,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 금융시스템의 취약, 그리고 과대 평가된 자국 통화 가치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크루그만(1988)이 지적했듯이 이 원인들의 배후

에는 다시 인간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다시 말해 도덕적 해이가 우리 나라 경제의 과잉투자, 높은 부채구조, 금융 시스템의 취약을 초래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란 자신의 행위 때문에 발생한 비용(혹은 나쁜 효과)을 남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할수록 어떤 행위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이 무너져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가 심해지는데, 이는 청지기 정신의 타락에서 비롯된다. 도덕적 해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보험시장을 예로 들어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화재보험을 보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화재 예방을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나, 일단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화재 예방에 전보다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된다면 이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다¹⁾. 화재보험 가입자들이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에 빠질수록 화재 발생의 빈도는 높아지고, 따라서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그런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화재예방 비용을 감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행위의 비용을 떠넘기는 셈이 된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가 극단적으로 심할 경우, 보험료가 너무 높아져서 아무도 화재보험에 가입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보험이라는 제도인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면 국민들에게 유용한 기능을 하는 보험제도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결과가 발생한다.

도덕적 해이는 청지기 윤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태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맡긴 물질을 선하게 관리하기를 원하셨고(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 누가복음 19장의 므나의 비유), 우리에게는 우리의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회계 보고할 의무가 있다(마 18:23).

현실적으로 도덕적 해이는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쉽게 발생한다. 앞의 예에서 화재예방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고 있는

1) 화재 예방의 주의에는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지, 그렇지 않는지는 다른 사람들은 잘 관찰할 수 없다. 그래서 특히 한 사람의 행위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서는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골 4:23)는 주님의 명령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청지기 정신의 파괴에서 비롯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토지투기이다. 토지 투기는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고금리, 고임금, 고물류 비용 등을 초래하여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토지투기로 형성된 땅값의 거품이 터지면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토지담보에 크게 의존하는 금융기관의 채권이 부실화되고, 이는 자금의 배분을 담당하는 금융기능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투기는 청지기 윤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청지기가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터’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토지투기는 바로 청지기의 일터를 빼앗는 작용을 한다.

토지투기는 당장 이용하지 않을 땅을 매입함으로써 땅에 대한 가수요를 일으켜 땅값을 인위적으로 높여 진정으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경제위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장을 지을 토지가 부족하다는 불평과, 설령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땅값이 너무 높아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자주 터져 나왔다. 그렇다면 토지 투기자는 청지기가 일할 터전이 공급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셈이다. 나아가 토지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은 청지기의 정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청지기는 자신의 일을 통해 정당한 몫을 추구해야 한다. 불로소득의 추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1988년과 89년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주식가격의 폭등은 일부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다 주었고 이는 곧바로 산업 전반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졌다.

청지기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파괴하며 도덕성을 타락시키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대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라는 현상이 있다. 이는 대개의 경우 뇌물을 통한 부당이득의 추구하고 부패라는 불의의 형태로 나타난다. 지대추구 행위는 사회의 협동과 조화, 정의를 파괴함으로써

경제적인 면에서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하는데 이것도 바로 청지기 정신의 파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잉투자와 금융시스템의 문제 등의 일차적 원인에는 도덕적 해이 현상과 토지투기, 그리고 지대추구 행위가 도사리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적 문제들의 배후에는 청지기 윤리의 위기라는 정신적, 영적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제도적 모순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지기 윤리의 회복을 위한 처방이 더욱 중요하다.

II. 경제위기의 원인

여기서는 우리 나라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흔히 지적되는 과잉투자와 과대부채,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다는 것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과잉투자/과대부채와 도덕적 해이

과잉투자란 자본이 특정 분야에 ‘너무 많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분야에 과잉 투자되면 다른 분야에서는 필요한 자본이 모자라게 되어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경쟁력이 약화된다. 그렇다면 과잉투자의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본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투자되면 그 분야에서의 투지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의 투지수익성과 외국의 그것을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의 과잉투자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제조업의 수익성과 외국의 그것들을 비교한 표가 <표 1>이다.

<표 1>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평균적으로 미국의 약 43%, 경쟁국 대만의 55%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표 1> 각국의 제조업 수익성(%)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매출액 대비 경상 이익률	한국	1.8	1.5	1.7	2.7	3.6	1.0
	미국	3.7	-	4.0	7.5	7.9	-
	일본	3.4	2.6	1.9	2.4	2.9	-
	대만	4.0	3.4	2.9	4.9	5.1	-
자산 대비 경상 이익률	한국	1.8	1.5	1.6	2.6	3.6	0.9
	미국*	2.6	-1.0	3.0	5.6	6.3	-
	일본	4.0	2.8	2.0	2.5	3.1	-
	대만	4.0	2.9	2.5	4.4	4.3	-

*미국은 자산대비 순이익률 <자료 :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각 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본에 비해서도 94년, 95년을 제외하고는 낮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자산대비 경상이익률도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 제조업에 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잉설비 투자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 또 하나의 자료는 자기자본 대비 고정투자비율이다. <표 2>의 전반부는 각국의 자기자본 대비 고정투자비율

<표 2> 각국의 제조업 부문 설비투자과 차입금 의존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자기자본 대비 고정투자 비율*	한국	219.3	227.3	218.5	220.2	212.5	237.0
	미국	159.8	-	178.7	172.9	169.2	-
	일본	137.4	141.1	144.3	142.6	139.1	-
	대만	110.3	116.6	111.5	107.1	102.2	-
총자본 대비	한국	44.6	47.2	46.8	44.5	44.8	47.7
	미국	29.4	-	27.4	26.8	26.4	-
차입금 의존도**	일본	34.1	39.6	36.8	36.2	34.8	-
	대만	27.2	35.6	26.0	24.2	26.2	-

*(고정자산+투자와 기타자산)/자기자본 비율, **(장단기 차입금+회사채)/총자본비율
<자료 :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각 호>

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50%이상 고정투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상의 자료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 나라는 과잉투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잉투자가 어떤 식으로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가 살펴보자. 먼저 특정 분야에의 과잉투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 이는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는 자금이 모자라는 반면 오히려 생산성이 이미 낮아진 분야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다. 이는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우리 상품의 생산비를 높인다. 예컨대 경제위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상품의 해외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과잉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또 다른 나쁜 효과는 금리의 상승이다. 지속적인 투자수요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이는 자금의 배분과정에서 소외된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높여 신규기업의 진입과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한다.

마지막으로 과잉투자는 자본만이 아니라, 과잉 투자된 분야에서의 노동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켜 임금상승을 유발한다. 이와 같이 과잉투자는 경제 전반에서 거품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의 과다한 차입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2>의 후반부는 총자본 대비 차입금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대만에 비해서 우리 나라 제조업 분야의 차입금의 비율이 대단히 높을 뿐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차입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실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대기업들의 차입금 비율은 <표 2>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높다. 96년 말 현재 은행여신 2500억 원 이상인 51개 재벌 중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재벌 수가 21개에 달하고 있다(김준경 1998). 부채비율이 높은 경제는 대내외적 경제충격에 대단히 취약하다. 1997년 여름 동남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발발했을 때 우리 나라에 돈을 빌려준 해외 투자기관들은 신속한 여신회수에 나섰고,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상황이었다. 그

결과 부채비율이 높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지적된 과잉투자나 과대부채 문제와 영적 문제라 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먼저 도덕적 해이가 기업경영 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의 기업 풍토에는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믿음이 뿌리내리고 있다. 즉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다.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고도 성장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정부로부터의 특혜나 지원을 받아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의 관행이 형성되었으리라는 의혹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또한 이들 기업들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도산에 따르는 사회적 파장에 대한 정치적 고려 등으로 덩치가 큰 기업은 정부가 어떻게든 살린다는 믿음이 자리잡아 왔다²⁾. 일단 이러한 믿음이 형성되면 기업경영은 몸집 불리기, 방만한 경영, 과잉투자의 패턴을 밟아갈 것이란 것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즉 실패와 위협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높은 이윤을 노리려는 인센티브가 커진다는 것이다. 만약 대형투자 사업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밀쳐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실패할 위험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성공했을 때의 이득은 큰 것이 보통이다. 대마불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실패로부터의 손실을 정부(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크루그만(Paul Krugman)의 모형을 이용하여 상기의 논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한 나라의 생산함수를 다음 (1)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하자. 여기서 Q , K 는 생산량과 자본량을 각각 나타내고, u 는 (+)의 값과 (-)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변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u 가 절대값이 큰 (-)의 값을 실현한다면 기업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A 와 B 는 어떤 상수

2) 부도가 난 기아와 한보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대마불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이다.

$$Q = (A + u)K - BK^2 \quad \text{————— (1)}$$

시장 이자율은 R 이라 하자. 이러한 경제에서 적절한 자본량은 얼마일까? 경제이론에 의하면 자본이 생산에 기여하는 몫과 시장 이자율(자금 조달비용)이 같아질 때까지만 투자하는 것이 적정 투자수준이다. 만약 자본이 생산에 기여하는 몫이 이자율보다 크다면 자본을 더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다. 반대로 자본이 생산에 기여하는 몫이 이자율보다 작다면 너무 많은 자본이 투입된 것이다. 이 경우 투입된 자본량을 줄여서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³⁾. 따라서 적정 자본량의 수준은 (1)식으로 표현된 생산함수에서 자본이 생산에 기여하는 몫과 자본조달 비용인 이자율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자본이 생산에 기여하는 몫은 자본의 한계생산력이라 불리는데, 이는 생산함수를 자본에 대해 미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 자본량의 수준은 다음의 식을 만족하는 자본량 K 가 된다.

$$A + u - 2BK = R \quad \text{————— (2)}$$

그런데 확률변수 u 는 사전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사전적으로 적절한 자본량을 계산할 때는 u 대신 u 의 기대값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⁴⁾. 그러므로 (2)식의 조건에서 u 를 u 의 기대값 Eu 로 바꾸어 넣고 K 에 대해 풀면 (3)식의 자본량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적절한 규모의 자본량이다.

$$K = (A + Eu - R)/2B \quad \text{————— (3)}$$

도덕적 해이가 없다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3)의 식으로 표현된

3) 투입된 자본의 총량이 적어질수록 단위당 자본의 생산력은 커진다.

4) 사전적(事前的)이란 확률변수가 특정 값을 실현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만큼의 투자를 한다. 즉 u 의 기대값의 크기에 따라 적정 투자량을 결정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u 의 기대값을 고려한다는 것은 u 의 값으로 (-)값이 실현되어 투자사업이 실패할 가능성까지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즉, 적정한 투자규모란 그 투자사업이 성공했을 때의 이득과 함께 실패했을 때의 가능성도 동시에 고려하여 위험을 너무 크게 안지 않도록 투자의 규모가 결정되는 상태인데, 도덕적 해이가 없을 때는 시장의 힘에 의해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실패한 투자에 대한 손실을 누가 모두 보상해 준다면 기업은 u 의 값이 (-)가 되는 경우를 고려조차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경우 u 의 기대값에는 (+)의 값만 고려되어 Eu 의 값이 커진다. 특정 투자사업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커짐에 따라 투자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이 도덕적 해이는 기업들이 투자사업의 평가에 과신을 갖도록 만들며, 실패의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과잉투자를 초래하게 된다.

위의 논의를 숫자를 넣어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A=2$, $B=0.5$, $R=1$ 이고 u 는 -1이나 +1이 발생할 가능성이 각각 반반씩이라 하자. 도덕적 해이가 없다면 이 경우 적정 투자규모는 식(3)에 의하면 1이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기업이 u 의 값으로 -1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Eu=1$ 이 되고, 따라서 기업은 투자규모를 2로 결정해 과잉투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도덕적 해이는 과잉투자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제 우리 나라 기업의 과대부채 문제를 살펴보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기업들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대단히 높다. 이것이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대외 부채 상환압력을 가중시키며, 해외자본의 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나라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채비율이 특히 높은지 살펴보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기업들은 ‘대마불사’라는 믿음 때문에 덩치를 키우

고 과대 투자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그런데 투자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여기서 우리 나라 기업들의 자금조달의 행태가 문제된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과 외부에서 차입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이 되고, 후자의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은 타인자본이 된다. 자기자본은 말 그대로 기업 자체의 자금이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 그러나 대주주(기업 오너)의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감소한다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의 지분이라 할 수 있는 주식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것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되어 소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너가 기업을 자신의 '사유물'로 생각할수록, 기업의 '지배'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주식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기피한다. 반면에 투자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하면 오너의 상대적 지분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매력이 있다. 더욱이 외부차입 자금으로 행한 사업이 성공할 경우, 자기 자본만을 이용한 경우보다 투자수익률이 훨씬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라 부르는 이 효과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50%의 투자수익률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다 하자. 자기자본 100억 원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면 50억 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면에 자기자본 100억 원 이외에 외부에서 100억 원을 더 차입하여 총 200억 원을 투자하면 순수익이 100억 원(200억 원의 50%)이 된다. 이 경우 자기자본 대비 투자수익률은 100%가 되는 셈이다. 즉 외부자금을 이용하면 투자수익률이 두 배가 된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벌고자 하는 기업의 오너일수록 외부차입금에 의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는 (-)의 방향으로도 작용한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만약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자기자본만 투자했다면 투자원금만 날리는 반면 타인자본을 이용한 경우에는 부채상환의 부담으로 기업이 도산할 위험에 빠진다. 이러한 (+)의 레버리지 효과의 가능성과 (-)의 레버리지 효과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건전한 기업은 외부차입을 과다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기업들은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 발생할 (-)의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할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할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은 도덕적 해이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마불사의 믿음을 가진 대기업 오너는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정부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될수록 많은 타인자본을 이용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될 뿐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차입을 할수록 경영능력을 좋게 평가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기업들의 과대한 부채 비율의 배후에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도사리고 있다.

2. 부동산 투기와 비효율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

우리 나라 경제를 멍들게 한 중요 요인으로 지난 30여 년간 고질적으로 계속되어온 토지투기와, 그로 인한 토지가격의 상승을 들 수 있다. 토지투기란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며 땅을 사두는 것을 말한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토지투기는 누구에게나 큰 유혹이 된다. 실제로 과거 토지투기에 몰두한 사람들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전국 평균 땅값이 1969년에는 53.4%, 1977년에는 33.6%, 1978년에는 49%, 1983년에는 18.5%, 1989년에는 32%나 올랐다. 그 결과 1982년부터 1992년 기간 동안 매년 경상 GDP의 약 72%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이 토지에서 발생하여 지주들의 손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부동산 투기 붐은 가난한 자를 더욱 가난하게, 부자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토지투기가 이와 같은 분배적 정의만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과거에 지속된 토지투기와 그로 인한 고지가가 우리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멍들게 했는가 살펴보자.

첫째, 토지투기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의 발생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파괴했다.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땅투기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한탕주의’가 국민 정신을 오염시켰다. 불로소득을 차지한 계층은 과소비로 경기를 과열시켜 경상수지 적자에 기여했고, 땅투기의 기회에서 소외된 계층은 집값, 전세금 상승의 부담 속에서 근로에 대한 의욕이 감소했다.

둘째, 높은 지가는 기업들에게 높은 지대비용을 요구했다. 우리 나라 기업의 토지구입 부담은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100배나 크다⁵⁾.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신규 진출하는 데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경제의 활력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셋째, 한 자료에 의하면 1996년 현재, 우리 나라의 물류비용은 GNP대비 약 15%를 상회하고, 제조업의 총매출액의 약 17% 이상을 차지한다(이용재 1996). 총매출액 대비 일본의 물류비가 8.84%, 미국의 물류비가 7.72%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의 물류비는 이들 나라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물류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은 철도, 도로, 항만 등과 같은 사회 간접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 간접자본 부족의 원인으로 너무 높은 땅값이 꼽힌다. 예컨대 용지 보상비의 고속도로 전체 건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부 고속도로의 10%에서 1995년 수도권권의 경우 95%를 차지할 정도이다(이진순, 1995). 사회 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이 우리 나라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넷째, 토지투기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은 임금을 요구하도록 만들었다. 경쟁 상대국보다 임금이 높아서 기업의 대외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사실 고임금의 배후에는 높은 토지가격과 그로 인한 높은 집값, 전세값이 그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섯째, 토지투기와 그에 따른 토지가격의 상승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 금융기관들은 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출을 한다.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은 대출받은 자금을 기업이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금융기관 자신과 고객을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실 대

5) 1996년 전경련이 1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25개 국내기업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공단분양가는 평방미터당 148.9달러로 중국 현지 공장에 비해 4.2배, 동남아에 비해 6.7배, 해외 평균치의 5.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금융기관은 성가신 대출심사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의 도덕적 해이이다. 이러한 대출상의 도덕적 해이는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더욱 강화된다. 즉 땅을 담보로 내놓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심사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토지가 격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해 금융기관은 토지담보만 의지해 대출심사를 사실상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1985년에서 1996년 사이 일반은행 대출금 중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약 40%에 이르며,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96년 말 현재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57.6%에 달하고 있다(김준경 1998). 금융기관들은 담보만 믿고 대출금의 용처에 대한 수익성 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땅값이 하락 내지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울 때 채권의 확보를 위해 땅을 처분하려 해도 잘 처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매각된다 해도 처음에 담보로 잡을 때의 예상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값을 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부동산 담보 관행에 의한 대출은 금융기관의 부실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금융시스템이 취약하여 우리 나라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 문제의 배후에도 금융기관이 청지기적 정신에 입각한 엄격한 대출심사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덕적 해이)과 토지투기의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지대추구 행위와 부정부패

인간이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려는 행위를 크게 생산적 행위와 비생산적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근로는 대표적 생산적 행위이다. 비생산적 행위는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전혀 부가하지 않으면서, 이미 생산되어진 재화나 용역을 차지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재화의 가치는 사회적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따라서 지주가 지대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사회에 어떤 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대를 수취한다는 것은 생산활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생산되어 그 사회에 존재하는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배경으로 경제학에서는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가치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행위를 ‘지대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뇌물 제공은 지대추구 행위가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난 예가 된다.

한 사회에서 지대추구 행위가 성행할수록 그 사회는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 되며 생산이 저해된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자원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이미 생산된 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데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이다⁶⁾.

우리 나라의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과도한 지대추구 행위이다. 앞에서 논의한 토지투기도 국민들이 지대추구 행위에 몰두한 예가 된다. 더욱이 만연한 뇌물관행과 부정부패는 우리 나라에 번진 지대추구 행위의 정도를 가늠해 주고 있다. 국민들이 정직하게 일해서(생산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뇌물을 주고 규칙을 어겨서 돈을 벌려 한다면 사회 전체로 볼 때 엄청난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이 초래된다. 뇌물은 주요 의사 결정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신 16:19) 국가의 자원과, 기업의 자원 그리고 개인의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다.

국민들의 도덕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생산의 비효율과 낭비, 비용의 상승은 필연적이다. <국제투명성협회>(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매년 각국의 부패도를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깨끗함에서 1997년에는 52개국 가운데 34위, 1998년에는 85개국 중 43위를 차지했다(조선일보 1998. 10. 16일자). 98년 한국과 같은 등위를 기록한 나라는 세계

6) 지대추구 행위의 과정에서 사회적 자원과 에너지가 원래 다툼의 목적이 되었던 가치만큼 낭비되어 없어져 버리게 되는데, 이를 ‘지대소실’(rent-dissipation)이라 부른다.

에서 가장 문맹률이 높고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의 하나인 짐바브웨이다. 우리처럼 경제위기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나라들의 부패정도가 대단한 나라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멕시코는 56위, 인도네시아는 80위, 태국은 61위, 브라질은 46위, 러시아가 76위이다. 반면에 아시아 전체가 경제위기에 고통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비교적 견고한 경제를 자랑하는 싱가포르 7위, 대만이 29위, 홍콩이 16위이다. 진정한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우리의 타락한 도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III. 경제위기 원인들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 - 청지기 윤리의 위기

지금까지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우리 경제의 과잉투자와 과대한 부채, 비효율적 경제구조, 금융기관의 부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살펴보았다. 또한 현상적으로 나타난 이들 요인들을 도덕적 해이, 토지투기, 그리고 지대추구 행위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았다. 이제 도덕적 해이, 토지투기 그리고 지대추구 행위는 다시 청지기 윤리의 타락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헤이(Donald Hay)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경제생활의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청지기 정신을 꼽고 있다. 예수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친히 가르쳐 주고 있다.

-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눅 12:42)
-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

청지기란 주인에게 고용된 대리인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청지기의 직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적 요소가 있다. 첫째, 인간은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인간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주인처럼 되고자 했을 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창조이야기는 보여준다. 둘째, 청지기는 열심히 성실껏 일해야 한다. 성경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권하기도 하고(잠 6:6),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살후 3:10)고 한다. 셋째, 청지기는 열심히 일하되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처벌을 받는다. 누가복음 16장에 소개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청지기는 언젠가는 반드시 주인에게 자신의 물질관리에 대해 보고를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청지기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 보고를 해야 함을 나타내는 성경구절은 많다.

-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눅 19:15)
-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롬 14:12)
-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마 18:23)
-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계할 새(마 25:19)

다섯째,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일을 하되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 이는 세속적인 경영의 원리와 일맥 통하는 면이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그 효율의 목적이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4:23)는 주인의 뜻에 맞게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라는 명령이다. 여섯째, 청지기는 주인을 위한 자신의 일을 통해 정당한 몫을 얻는다. 따라서 불로소득의 추구는 청지기의 윤리에 위배된다.

이제 도덕적 해이, 토지투기, 그리고 지대추구 행위가 청지기 윤리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자. 청지기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주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 즉 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이 청지기에게 요구된다.

기독교 윤리에서 선한 청지기의 추구는 인간의 경제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는 자신이 행한 일의 나쁜 결과를 남에게 전가하는 태도이다. 특히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일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도덕적 해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기업가가 청지기 직분에 충실하다면 마구잡이 식으로 외부자금을 빌려와 위험한 사업을 무모하게 벌리지 않을 것이고, 청지기 윤리에 투철한 금융기관은 사업성에 관한 엄격한 심사 없이 고객에게 맡긴 돈을 함부로 대출하지 않을 것이다. 물질을 운용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회계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졌다면 과잉투자나 과대부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토지투기도 청지기 윤리에 정면으로 반한다. 청지기는 주인을 위한 일을 통해 정당한 몫을 추구해야 한다. 선한 청지기는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않는다. 토지투기는 불로소득의 추구라는 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토지투기는 다른 사람이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용도 한다. 선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터전, 즉 토지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각 인간이 청지기로써 일을 할 수 있도록 토지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셨다(레 25장). 성경은 여러 가지 율법들로 토지가 공평하게 분배되고 그 분배가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토지를 분배할 때 그 수효대로 나누고 또한 제비를 뽑아 공정성을 유지토록 했으며, 토지를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사정상 토지가 팔렸을 때는 무름 제도로 되찾아 주게 했으며, 그것도 안되면 회년에 모든 토지를 원래의 소유주에게 되돌려 주는 법들이 있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토지의 이익은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원칙인 것이다.

토지투기는 땅값을 상승시킴으로써 토지를 진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용하지 않을 토지를 단순히 보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토지를 이용할 기회를 빼앗는다. 경제위기 직전 토지투기가 극성을 부릴 때 기업을 경영하는 많은 사람들은 공장

터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또 토지가 있다 해도 땅값이 너무 높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했다. 그렇다면 토지투기자는 청지기가 일할 터전을 원천 봉쇄하는 셈이 된다.

지대추구 행위도 청지기 윤리의 타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지기는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일하며,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추구하도록 요구받는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물질을 일을 통해 선하게 관리해야 한다. 대개의 지대추구 행위는 불로소득을 추구하려는 동기에서 시작된다. 즉 생산에 참여하기보다는 이미 생산되어진 가치를 여러 가지 불의한 방법으로 차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뇌물과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이 따른다. 지대추구 그 자체에서도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이 초래되지만, 지대추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 확산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작용도 한다. 일하지 않고 편법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잃을 수 있다. 또한 지대추구 행위는 주어진 가치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의 성격이 강하므로, 지대추구 행위가 심각한 사회는 공동체 의식과 협동의 정신이 손상되고 시기와 질투, 분쟁이 일어난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경찰, 사법 비용과 송사비용, 중재비용 등의 형태로 사회에 부담을 주게 되고 경제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IV. 과제 - 청지기 윤리의 회복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잉투자, 과대부채,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 만연한 부정부패 등은 모두 청지기 정신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향은 명백해진다. 청지기 윤리의 회복이 현재의 경제적 난국을 타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열쇠이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난관의 실상은 영적 타락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함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청지기 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은 개인적, 교회적 차원과 사회

적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정책적 과제

청지기적 정신이 보호받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과 더불어 깨끗한 사회,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조치와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금융실명제 유보나 유흥업소 심야영업의 허용이 그 예이다. 순수하게 경제적 논리로만 따진다면 금융실명제를 폐지하거나 유보하여 검은 돈이라도 잘 돌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 또한 심야营业을 허용하는 것이 위축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실제로 이러한 논리들이 힘을 얻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청지기 윤리의 회복과 그것을 통한 경제적 난관 극복이 정도(正道)라 믿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판단할 때 그러한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다소 시간이 지체되는 듯이 보이더라도 국민들의 청지기적 정신을 보호하고 되살리는 것이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검은 돈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음성소득을 방지하여 청지기 윤리를 다소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선한 청지기의 영을 타락시키는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금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돈 세탁 방지법'과 같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조치들도 경제적인 난관의 극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이 경제위기의 극복과는 큰 관계가 없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청지기 정신의 회복 없이는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살리려는 정책적 노력도 보인다. 그것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쉽게 만들고 부실채권에 허덕이는 금융기관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그러나 청지기 윤리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그것도 잘못된 정책방향이다. 지금은 토지투기에 골몰했던 기업이나 개인들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시기이다. 또한 땅값의 거품이 제거되고 있는 과정이다.

청지기 윤리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적 과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배려이다. 경제위기의 타격을 가장 심각히 받고 있는 이 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이 절실한데, 공공 취로사업, 기술교육, 법률구제, 최저 생계비 보조 등의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2. 개인적인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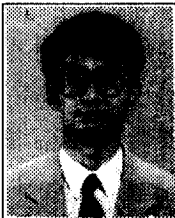
법률과 제도가 아무리 잘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이 철저한 청지기적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예컨대 국민자를 위한 공공 취로사업에 탐욕스런 중산층 주부들이 취업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실직자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걸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챙기는 교육기관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점심값과 교통비가 지급된다는 유혹 때문에 진정한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등록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도덕적 해이, 지대추구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다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지대추구 행위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들의 개인적 삶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청지기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경제위기의 탈출구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민 다섯 중 하나가 그리스도인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위기 발생과 극복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청지기 윤리에 철저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청지기적 삶을 살도록 권면하지도 못했음을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 사랑과 배려, 나눔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어느 때보다 사

회에 눈을 돌려 가난한 자의 구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난다. 현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제위기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보아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행함을 회계(會計)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준경, 「기업의 과다부채와 장기불황 가능성」, 한국개발연구원, 1998/3.
이용재, “도로와 철도간 화물수송 역할분담 방안”, 「국토정보」, 국토개발연구원.
이진순, 「경제개혁론」, 비봉출판사, 1995.
전강수, 한동근, “한국의 토지문제와 경제위기”, 1998년 한국경제학회 국제 논문발표대회
한동근, “그리스도인의 땅투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도생활」, 1997/4.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호
Donald Hay, *Economics Today -a Christian critique-*, 「현대경제학과 청지기 윤리」, 전강수 외 옮김, IVP, 1996.
Paul Krugman, “What Happened to Asia?”, 1988.



■ 한동근 ■

1960년 대구 출생. 영남대에서 경제학 전공,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 취득, 미국 Purdue대학에서 국제경제학으로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현재 기운실 대구지역 실행위원,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현대경제학과 청지기 윤리」(IVP, 공역) 역서와 그밖에 “기독교 경제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통합연구』 26호) 등 다수 논문.